



경제발전과 축산정책의 방향, 한국양돈산업의 경제통합구상, 축산물 유통실태와 개선과제등 3개 논문 발표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문팔용)는 지난 6월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개발의 정책과제토론회를 가졌다.

본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 경제발전과 축산정책의 방향(발표자 김형화 농경연 수석연구원), 제2주제로 한국양돈산업의 경제통합구상(발표자 박영인 미사료 곡물협회 한국지부장), 제3주제로 축산물 유통실태와 개선과제(발표자 권원달 충북대 교수)등의 3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경제발전에따라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이 점증

김형화박사는 경제발전과 축산정책의 방향을

경제발전과 축산의 변화, 축산의 공급발전과 정책효과, 축산의 기반조성과 개발효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축산물의 수급변화, 농가소득의 축산비중, 축산물의 수입액과 국제수지, 축산부문 모형설정, 모형에 의한 정책효과, 사료수입에 의한 축산효과, 초기개발에 의한 축산효과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우리의 축산이 과거에는 농업의 부업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으나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축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날에 있어서 축산의 역할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가소득의 확대, 외화사용의 억제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축산이 담당하기 위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가소득의 증대, 외화사용의 억제를 위해선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자급율을 제고시키는 축산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는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자급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여건으로도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축산물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고 하여 수입을 늘리고 그 생산기반을 확대하지 않으면 축산물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우리의

축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며, 식량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수입을 늘려 해외의존도를 높이면 우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역할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나 농가소득의 증대, 외화사용의 억제등의 역할은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화가득이 악화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역할도 끝내는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농업에서 축산의 비중은 더욱 중요해질 것 이므로 앞으로의 축산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통합구조란 종돈·자돈·사료·사육·도축·유통등의 공급부문과 소비의 수요부문을 조정하여 농·기업상호의존, 기능특화 분담, 공존적 독점경쟁, 통합자·사육자계약으로 중앙집중관리, 단일의사결정, 이윤중심점 합일, 공통 위험부담의 기대 효과가 있어

박영인 박사는 한국양돈산업의 경제통합구상을 양돈산업의 구조적 문제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 상업양돈과 경제통합, 통합적 양돈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양돈산업의 구조적 문제성으로 다수농가에 의한 소규모생산, 유동적인 생산단위, 비연계적 독자경영, 산업촉진 및 조정기능의 결여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자율조정, 협동조합, 마아케팅오-더, 마아키팅 보오드, 통합조정등의 제도적 장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상업양돈과 경제통합을 농기업의 개념, 경영통합에 의한 상업양돈정립 측면에서 분석하고 통합적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통합여건의 성숙, 통합의 성취목표, 통합유형과 계약형태, 통합자와 사육자간의 기능분담, 통합의 추진, 예상문제점 등을 고찰 분석하였다.

이 결과 박 영인 박사는 한국양돈산업이 당면

하고 있는 복합적 문제는 경제통합체계의 도입,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당면과제의 본원이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양돈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경제구조와 산업조직을 개편하는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바 이에 가장 적합한 경제체계가 경제통합이라고 주장하고, 통합방식은 경제환경의 필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한국양돈의 실정에서는 규범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인 통합추진을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함께 통합관련기업, 협동조합, 사육자 및 정부가 긍정적으로 통합을 수용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교육과 대화는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규모화·능률화, 안정화 방향의 양돈 통합구조를 개편하여 수급균형·가격 안정·산업안정 달성을 할 수 있어

또 양돈산업이 통합체계로 정착하기 까지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에 적절한 대책은 적시에 강구되어야 하며, 또 소규모 사육 농가의 소득보호와 기업통합의 과정적 경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통합사업은 강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각 단위통합체가

수급조정의 하부구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국적 조정업무를 주관할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기존조직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 전국적 조정기구는 산업촉진 및 수급조정업무 총괄, 관측자료의 이용과 단위 통합체의 생산 판매 거점을 통한 생산조절, 과잉시의 수매 비축 및 수출, 부족시의 비축량 방출 및 수입, 안정기금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이와같은 통합체계와 수급조정 전담기구가 유기적으로 운용될 경우 생산성향상과 산업안정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생육과 식육가격이 연계안되어 생축가격진폭심화로 양축경영 불안정 야기 식육소매상 전국에 17,632개소(1981년), 점포당 평균 돼지 8.7두, 소 2.6두 판매, 돼지 1두 판매당 이윤 16,596~6,459원, 소 1두당 판매이윤 25,748~15,613원으로 유통마진율이 소 9.2~11.1%, 돼지 14.8~23.9%로, 일본·대만의 33.5%~44%보다 낮아

권원달박사는 축산물 유통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유통구조,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유통기능, 부산물 유통실태, 축산물 유통과 문제점, 쇠고기 소매가격 표시제의 모순, 부위간 및 등급간 단일가격 적용, 식육가격수준, 육류간 가격차, 축산물유통의 새로운 동향(식육점의 종합전문화, 대량소매 기관의 진출과 소매시장 지배, 부분육 및 포장육의 발달과 식육소매방법의 구조적 변화,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에 따른 통합 현상), 축산물 유통 개선 방향(가격제도의 전환방향) 등을 고찰하고 축산물 유통 개선 과제는 축산물 가격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생축이 지육·정육의 가격체계가 연계성을 갖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축산물 유통은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가축시장, 도축장, 식육도매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이 규

모화하여 유통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특히 식육 소매단계에선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며 식육의 부위별 포장육 거래방법이 단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상 주제발표 소개를 끝마치고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제 1주제 토론에 나선 권오옥 영남대교수는 쇠고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급대책이 문제이며 돼지와 닭의 경우 주기적 파동을 막는 문제라든가 쇠고기 수입감소에 따른 축산진흥기금의 고갈등을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소도입량의 30%가 젖소인데 반해 우리나라에는 10%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우유에 대한 수요가 신장됨에 따

축산개발의 정책과제 토론회



라 젖소도입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쇠고기나 사료를 도입안하는 방향을 주장했다. 또 현 농수산부축산국을 축산 경영관리국이나 축산청으로 개편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수급이나 행정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호교수(충남대)는 제1주제 발표자가 외화절약을 위해 쇠고기도입을 줄이고 국내생산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이상이고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반론을 펴고 호주 쇠고기수입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그 반대급부로 바터가 되어 들여오는 것이 현실이며, 일본의 경우 젖소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화우가 증가된 예를 들어 육우의 도입없이 국내 한우증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조성된 초지는 사후관리미비로 약2/3가량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맞는 초지조성형태를 개발 보급하여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일교수(서울대)는 수요도 정책의 산물인데 이 논문은 이것을 결여했다고 지적하고, 사료곡물의 수입대체가능성과 기업축산이 등장하면서 부업농의 소득을 감식하고 있는데, 축산물 공급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묻고 1982년

도 농업조수익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1.6 %라고 발표했는데 순수익의 경우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화박사는 답변을 통해 본 논문은 쇠고기자급기반 증대로 외화절약을 하자는데 있으며 사료곡물 수입대체 가능성에 대해 보리를 사료로 이용할 경우 가격이 문제이며 배합사료로 이용하기 보다 농가가 바로 자급사료로 이용하면 가격은 높지 않으며 축산공급주체문제는 소의 경우 부업축산이 오래 지속될 것이며 돼지, 닭의 경우는 규모확대가 예상된다고 하고 그 주체는 농가가 담당하여야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2주제 토론에 나선 한백용전무(대한양돈협회)는 농민(사육자)도 종돈전문사육자로 육성하여야 하는데 축협의 계열생산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생산조절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찬길박사(건국대)는 한국양돈산업의 발전은 통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세농가에게 복잡하고 적용이 어려운 완전통합이 과연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고 양돈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생산물의 균일화·생산효율제고등이 달성되어야 하며 통합은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축산개발의 정책과제 토론회

뿐이며 생산과 유통을 잇는 부분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순박사(농경연 수석연구원)는 발표논문의 학술적 측면 가치를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의 안정대책 강구가 미흡하며 조금씩 적용해서 양돈산업을 완화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적인 조정과 생산할당문제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통합주체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생산효율을 높이면 좋지만 그와 반대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사육자에 대한 수탈이 더 강화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인박사는 답변을 통해 본 주제는 자신이 몸으로 느낀 상황을 조사한것이며 종돈생산은 농가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고 양돈산업은 원칙적으로 규모화 능률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합규모와 내용은 실증적인 연구가 더 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은 거래교섭기능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조정문제는 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주제 토론에 나선 **성배영부원장**(농경연)은 한우육가격과 수입육가격간의 관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관계, 쇠고기의 절대 가격문제를 지적하고 도매시장이 대규모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에도 도매시장이 발전되어야 하고 위생문제를 고려하여 생축경매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일 수석연구원(농경연)은 발표논문이 시장구조, 유통구조, 생산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이론적인 틀과 체계를 결여했으며 생산부문의 언급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김봉구교수(고려대)는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정책은 하한선을 두어 이보다 떨어질때 수매비축하여 생산기반과 소득을 지지하는 가격지지정책 보다 상한선억제정책을 펴 정책방향이 거꾸로 되었다고 지적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 시판가격을 어떻게 조정할것이냐가 쇠고기선호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곤 조사부장(축협중앙회)은 일부 백화점에서는 부위별 거래(등급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아직도 정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도축장은 규모화를 달성해야하며 포장육가공을 확대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부상식

기대되는 개량효과

수퇘지의 전체 평균 일당증체량이 0.85kg이고 이중에서 선발된 수퇘지의 평균 그것이 1.05kg이라 가정 한다면 이 수퇘지의 선발차는 0.20kg이 된다.

또 암퇘지의 전체평균 일당증체량이 0.70kg이고 이 중에서 선발된 암퇘지의 평균 그것이 0.74라고 가정한다면 이 암퇘지의 선발차는 0.04kg일 것이다.

따라서 평균 선발차는 0.02과 0.04를 더해 2로 나누어 주면 0.12kg이 된다.

그러므로 기대되는 개량 효과는 평균선발차 (0.121g)와 일당증체량의 유전력 (0.3)을 곱하여 0.036kg이 나온다.